



# 탈진실 시대의 팩트체크

정은령  
서울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  
SNU팩트체크센터장

# 팩트체크의 전개과정

fact chec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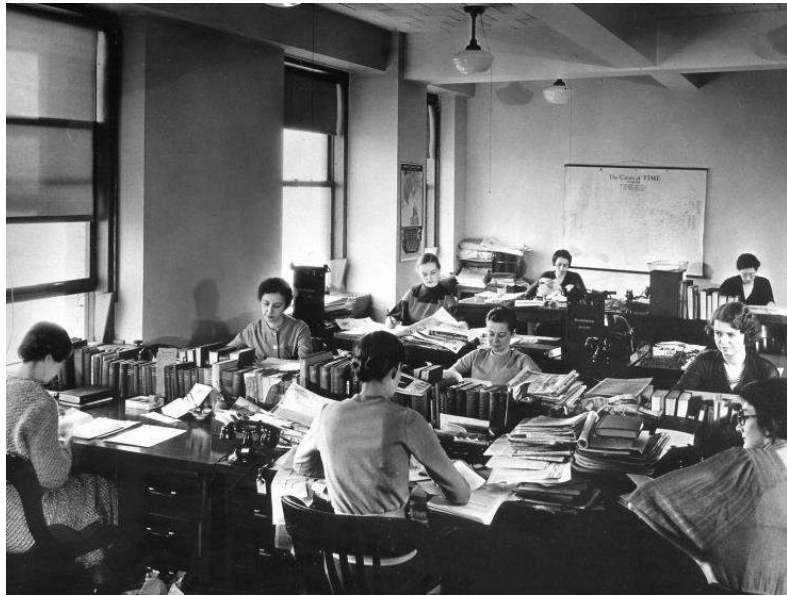


# 팩트체크의 기원

- 1920~30년대 미국 저널리즘, 특히 Time, New Yorker 등 뉴스매거진에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1920년대 미국 언론계의 풍경:
  - 기자들이 전문성 (professionalism) 을 강조하며 독자적인 조직을 결성해 윤리규약 작성.
  - 정확성 불편부당성을 강조하는 객관주의 (objectivity) 를 미국 언론의 규범 (norm) 으로 정착시킴.



# 팩트체커의 선구자들



1933년 Time지의 편집부

- 정확하게 최초 사례를 확인할 수는 없지만, 1930년대에는 fact checker 구인 광고가 확인됨.  
→ 즉 독자적인 직종으로 편집국 내에 존재했음을 방증.
- 초기에는 fact checker가 아닌 researcher로 불렸으며, 주로 대학을 졸업한 여성들이 취업.  
1970년대에 이르러 남성들도 이 분야에 취업
- 팩트체커들은 기자들이 써서 넘긴 원고를 한 단어 한 단어 검토하여 사실성 확인.  
때로는 다시 쓰기(rewriting)까지.



## 새로운 팩트체커들의 부상

- 1990년대 이후 경영난 등으로 전통적인 팩트체커들은 줄어들어 드는 상황에서 새로운 팩트체킹이 탄생.
- “The point of magazine checking is to prevent embarrassment and eliminate errors **before a piece goes live**, whereas **the new political fact-checking** usually devotes its attention to **careful analysis of an error someone else has made.**” (Lucas Graves)



# 객관주의 전통과 팩트체크 저널리즘

- 사실이 스스로 말하게 하라  
(Let facts speak for themselves.)
- “그는 이렇게 말했고,그녀는 이렇게 말  
했고” 식의 인용 위주  
(He says, she says journalism)  
: 전통적인 객관주의 취재기법은 취재 대  
상과의 거리두기 (detachment)를 통해  
불편부당성을 담보했다고 정당화.





# 미국 언론의 팩트체크 저널리즘 운동

- 1980년대 이후 정치인들의 발언 검증 중심으로 전개
- 기존의 언론사들이 수행해온 팩트체킹이 화자가 말한 내용을 정확하게 옮기는 것을 팩트체킹이라고 간주한다면, 새로운 팩트체킹은 인용구 안의 말이 사실(true)인가를 규명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라고 구별할 수 있다.  
즉 화자의 뜻을 훼손하지 않고 정확하게 ‘받아쓰기’ 했는가를 확인하는 것이 팩트체킹이 아니라 화자가 한 말 그 자체의 진실성 여부를 가리는 것이 현재의 팩트체킹의 핵심
- <https://www.politifact.com/factchecks/2022/jan/13/joe-biden/evidence-scant-joe-biden-was-arrested-protesting-c/>



## 현대적 팩트체크의 융성

- 2003년 펜실베이니아대학에 Fact Check.Org 출범
- 2007년 PolitiFact 출범
- 2009년 PolitiFact의 풀리처상 수상 (2008년 대선 보도)
- 2011년부터 Washington Post의 Fact Checker 상설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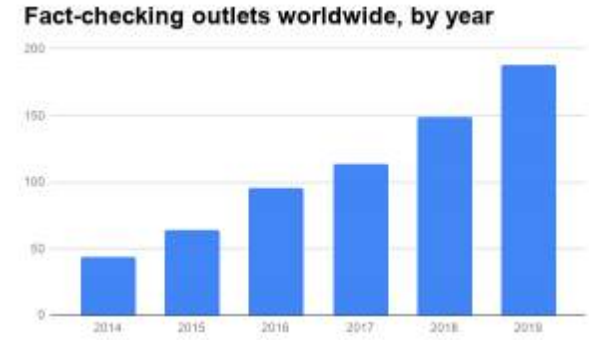


## 두 종류의 팩트체크

- 내부적 팩트체크 (Internal Fact Check)  
: 고전적인 팩트체크로서, 언론사 편집국 내부의 사전 검증 절차
- 외부적 팩트체크 (External Fact Check)  
: 1990년대 이후의 현대적 팩트체크. 언론사 외 대학, 시민단체 등도 참여
- 양자는 공존



# 팩트체크의 세계적 확산



- 2014년부터 세계 각국의 팩트체크 기관 수를 집계해온 듀크대 Reporter's Lab에 따르면, 2021년 6월 현재 팩트체크 기관은 102개국 341개.
- 2014년 첫 집계 때 44개로 출발

# 탈진실시대와 허위정보

fact check



# ‘탈진실 (post truth)’

“circumstances in which objective facts are less influential in shaping public opinion than appeals to emotion and personal belief” (Oxford dictionary, 2016)

분석가들은 사실 (fact)이 현대 정치의 배후로 옮겨갔다고 결론지었다. 정치가들은 더 이상 허위와 사실의 구별에 관심을 갖지 않고, 민주주의는 합리성으로부터 감성적인 정치체제로 이동했다.

*(Fake news, 2020)*



# 당면한 ‘가짜 뉴스’ 의 문제

가짜뉴스는 새로운 현상은 아니다. 그러나 최근의 가짜뉴스 양산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있다.

1.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인해 미디어 산업 진입 장벽은 현격하게 낮아졌다. 기술적으로 웹사이트를 구축하기도 쉬워졌고, 웹 콘텐츠 광고 수익을 통해 돈벌이를 하기도 쉬워졌다.
2. 소셜미디어는 가짜뉴스를 확산시키기에 적절한 구조를 갖추고 있다.
3. 메인스트림 미디어가 생산해내는 뉴스에 대한 신뢰도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4. 정치적인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Allcott & Gentzkow(2017), Social media and fake news in the 2016 election



# 허위정보와 Digital Gold Rus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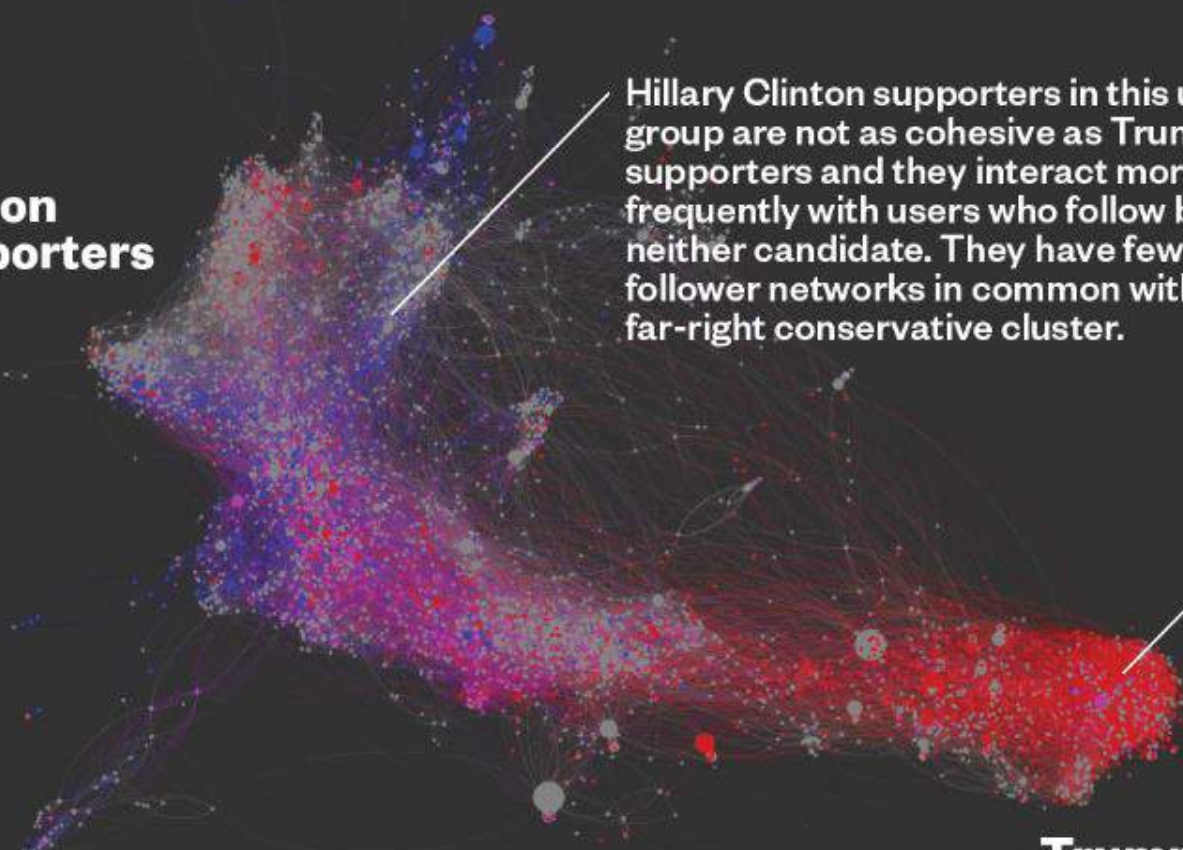


- “Teenagers in our city don't care how Americans vote.” he laughs.  
“They are only satisfied that they make money and can buy expensive clothes and drinks!”  
‘The city getting rich from fake news’  
(BBC,2016.12.5).

# Clinton and Trump supporters live in their own Twitter worlds

- Follow only Trump
- Follow only Clinton
- Follow both
- Follow neither

**Clinton Supporters**



Hillary Clinton supporters in this user group are not as cohesive as Trump supporters and they interact more frequently with users who follow both or neither candidate. They have few mutual follower networks in common with the far-right conservative cluster.

This large cluster of Trump supporters on Twitter have little mutual follower overlap with other users and are a remarkably cohesive group. They exist in their own information bubble.

**Trump Supporters**



# fake news? mis/disinformation?

- 다수의 연구자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가짜뉴스의 기본 구성 요소는 사실성(facticity)의 결여와 기만하려는 의도(intention to deceive) (Tandoc Jr, Lim, & Ling, 2018).
- 가짜뉴스는 이러한 두 구성요소의 정도에 따라 사실인 줄 알고 잘못된 정보를 공유하는 오정보(misinformation)와 사실이 아닌 줄 알면서도 악의를 갖고 공유하는 허위정보(disinformation)로 구분.
- 허위정보(disinformation)는 영어권에서도 상대적으로 그 연원이 길지 않은 용어. 허위정보라는 단어가 처음 쓰이기 시작한 것은 냉전시기였던 1950년대로 추정. 옥스퍼드 영어 사전(OED)은 허위정보가 러시아어 사전의 데진포르마치야(dezinformacija)로부터 온 것으로 기술.
- 허위정보는 애당초 냉전상황에서 정부와 정부 요원이 주도해 타국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생산하고 유포하는 거짓 정보였고, 이러한 연원은 현재의 허위정보를 둘러싼 미국과 유럽에서의 논쟁에도 그대로 계승.





# ‘가짜뉴스(fake news)’라는 용어의 문제점

- 첫째, ‘가짜뉴스’는 허위정보가 야기하는 복합적인 문제를 적절하게 포착해내지 못한다.
  - 허위정보들은 그 내용에 있어서 전적으로 거짓이 아니라 사실과 조작된 정보들이 교묘하게 직조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뉴스라는 형식을 흉내내지 않는 경우도 많음.
  - 허위정보 문제가 정보 생산보다는 유통, 즉 포스팅, 댓글달기, 공유, 트윗, 리트윗 등에서 빚어지는 것임을 간과하게 함.
- 둘째, 가짜뉴스는 정치적인 반대자들을 공격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됨.
- 셋째, ‘뉴스’의 신뢰도를 떨어뜨림.



# 허위정보 유형1:보건 이슈의 정치화,음모론



기타 | 코로나19

광화문 집회 참석자와 일부 교회 신도들의 코로나 검사결과를 보건소에서 조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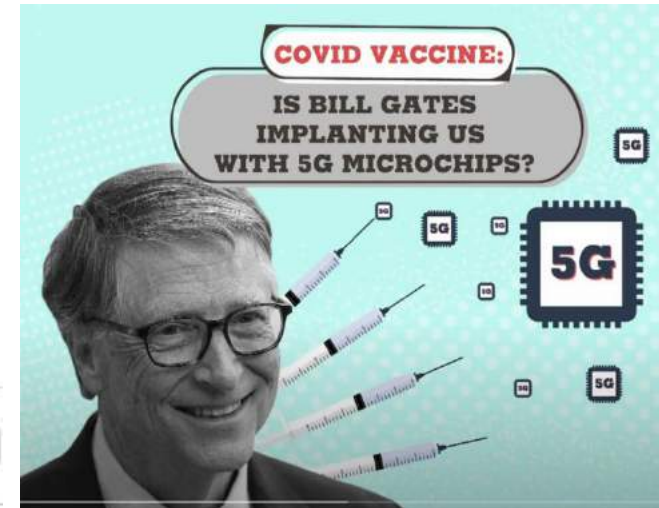


SNS, 인터넷 커뮤니티, 유튜브

출처: 지난 18일 유튜브에 게시된 '보건소 코로나확진자 병원서 검사는 음성' 영상

news 한국일보 파이낸셜뉴스 노컷뉴스 NEWSTOF

댓글 0 공유



<https://factcheck.snu.ac.kr/v2/facts/2445>



## 허위정보 유형 2: 하이브리드 위협



- ‘hybrid threats’ refers to the use of state-sponsored, but not officially affiliated (deniable), actors that do not resort to physical violence. The purpose of hybrid threats is to coerce the object of a threat into complying with the aggressor’s strategic interests.

(European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Policy Brief, 2019)



# 하이브리드 위협(hybrid threats)

- 러시아의 미국 대선 개입:

:러시아 정보국이 운영한 Internet Research Agency가 2016년 대선에서 트럼프 후보의 당선을 유도하기 위해 소셜미디어에 가짜 계정을 대량으로 만들어 허위정보 유포.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서의 허위정보:

:크렘린의 통제 하에 있는 언론사들을 통해 푸틴이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계가 인종말살 되고 있다”고 연설한 것이 지속적으로 보도되었으며 정보 당국이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에서도 이러한 정보를 끊임없이 확산.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허위정보 전은 2014년부터 본격화.

- EU는 2016년부터 역내 국가들이 연합하여 hybrid threat에 대한 대책을 세워 EU 국가들의 분열을 시도하는 러시아의 허위정보에 대응.



## 허위정보 유형 3: 혐오 조장



‘코로나19’ 팩트체크

**[팩트체크K]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로 중국인 공짜·할인?**

**[팩트체크] 중국인들 때문에 ‘건강보험’ 재정악화된다?**

**[팩트체크] 외국인 건강보험 적자 내국인이 메꾼다?**

- 정치적 경쟁자 뿐만 아니라 사회 소수자들을 허위정보로 공격하여 혐오 증대.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4376451>

<http://www.newstof.com/news/articleView.html?idxno=10268>

<https://www.newspost.kr/news/articleView.html?idxno=76220>



# 허위 정보 대응책

법적,  
행정적  
규제?

기술적  
통제?

사회적  
개입?



# 허위정보 대응책 1: 법적 행정적 규제

법적,  
행정적  
규제?

- 입법목적과 규율대상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정해 놓지 못할 경우, 언론 자유와 표현의 자유 제한 시비.



# 21대 국회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논란

-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허위·조작보도’라는 항목이 신설됨.  
‘허위의 사실 또는 사실로 오인하도록 조작한 정보를 언론, 인터넷뉴스서비스,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을 통해 보도하거나 매개하는 행위’
- 언론 자유 침해라는 언론계와 사회단체 반발로 현재 입법 중단 상태:  
‘고의 또는 중과실로 허위의 사실 보도’, ‘악의적이고 진실하지 못한 보도’ 등을 누가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며 정치적으로 법이 악용될 경우 언론 보도 위축 효과.
- 언론은 가짜뉴스 생산의 주체인가, 아니면 가짜뉴스를 검증하는 주체인가?





## 허위정보 대응책 2: 기술적 통제

### 기술적 통제?

- 알고리즘을 활용하는 방식은 현 단계에서는 참 거짓 여부를 가리기보다는 사실을 검증할 필요가 있는 내용을 걸러내는 수준 (오세욱, 2017).
- 특히 한글 문장의 알고리즘 적용을 위해 필요한 정보처리가 영문에 비해 어렵고 기반 기술 연구가 부족한 실정 (이준환, 2017).



# 인공지능 활용 자동화 팩트체크

- 자동화를 시도하는 이유는 허위정보가 생산되는 양과 속도에 대응하기 위한 것.
- 인간 판정자의 자의성, 주관성을 뛰어넘으려는 욕구도 반영.
- 현재 단계에서 자동화된 사실 확인 기술들은 방대한 정보의 빠른 처리를 통해 인간의 최종적인 사실 확인을 도와주는 수준이지 사실을 확정하는 단계까지는 어려움.
- 기계적으로 처리했다고 해서 그 내용이 초당파적이거나 사실임을 입증하지는 않음. 원 데이터의 편견이 반영됨.

<https://www.youtube.com/watch/PrB6ATJM2B0>



# 허위정보 대응책 3: 사회적 개입

## 사회적 개입?

- 가짜뉴스를 건건이 찾아내고 통제하는 방법으로 가짜뉴스를 줄어든게 만들 수는 없음.
- 그보다는 정보소비자이자 주권자인 국민들이 사실확인이 제대로 된 뉴스를 꾸준히 접함으로써 스스로의 삶을 결정하는 주요한 공적 사안에 대한 식견을 높이는 것이 근원적인 해결책.
- 탈 진실(Post-truth) 시대에 정보의 진위 여부를 가리는, 즉 사실을 검증하는, 전문가집단으로서 저널리스트들의 역할이 재발견되고 있는 상황.

# 한국의 팩트체크

fact check




# 한국 팩트체크 저널리즘과 19대 대선

- 2017년은 한국 언론 역사에서 “팩트체크 저널리즘의 원년” 으로 평가됨.
- 대통령선거 기간 각 언론사가 보도한 팩트체크 결과를 별도 섹션으로 운영한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팩트체크 코너에는 28개 언론사의 대선 관련 후보자 발언 공약 검증 내용이 게시.
- 2017년 대선 기간, 투표자 중 팩트체크 기사를 접해본 적이 있다는 응답자는 53%(N = 1,092)였음.



# SNU팩트체크의 출범

- 각 언론사의 팩트체크가 활발해진 것과 더불어 팩트체크를 위한 협업구조가 선보인 것도 이 시기의 특징.
- 2017년 3월 언론사와 대학 간의 협업 모델로 출범한 **SNU팩트체크**에는 2022년 5월 현재 31개 주요 언론사가 참여해 정치인과 공직자 발언의 사실 여부, 정치 경제 사회 등의 주제에 걸쳐 소셜미디어 등에 유통되는 루머의 사실성 여부 등을 검증.
- SNU팩트체크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교차검증 실시. 이는 서로 다른 언론사들이 동일 사안에 대해 독립적으로 팩트체크한 결과를 비교함으로써 검증의 신뢰도 높이는 모델.

최신팩트	한이슈
 <p>기타 광화문 집회 참석자와 일부 교회 신도들의 코로나 검사결과를 보건소에서 조작했다?</p> <p>출처: 지난 18일 유튜브에 게시된 '보검소 코로나 확진자 병행서 검사' 영상</p> <p>SNS, 인터넷 커뮤니티, 유튜브</p> <p>한국일보 파이낸셜뉴스 노컷뉴스 NEWSTOF</p> <p>댓글 0 공유</p>	 <p>2</p> <p>사실 여부</p> <p>사실 아님</p>
 <p>정치인(공직자)의 발언 홍준표 "소득분배 지나게수가 노무현 정부 때 가장 나았다"</p> <p>출처: 28일 중앙선정준표의원취재주관 대선 후보 TV토론회</p> <p>홍준표</p> <p>한국일보 YTN SBS KBS 중앙일보</p> <p>댓글 1 공유</p>	 <p>3</p> <p>정반의 사실</p>
 <p>정치인(공직자)의 발언 문재인 "우리 경제, 고용 상황이 나이지고 있다"</p> <p>출처: [민심] 문대통령 민주당 선대특사... "문재인 정부가 민주당 정부"</p> <p>문재인</p> <p>한국경제 한국일보 SBS 문화일보</p> <p>댓글 0 공유</p>	 <p>1</p> <p>정반의 사실</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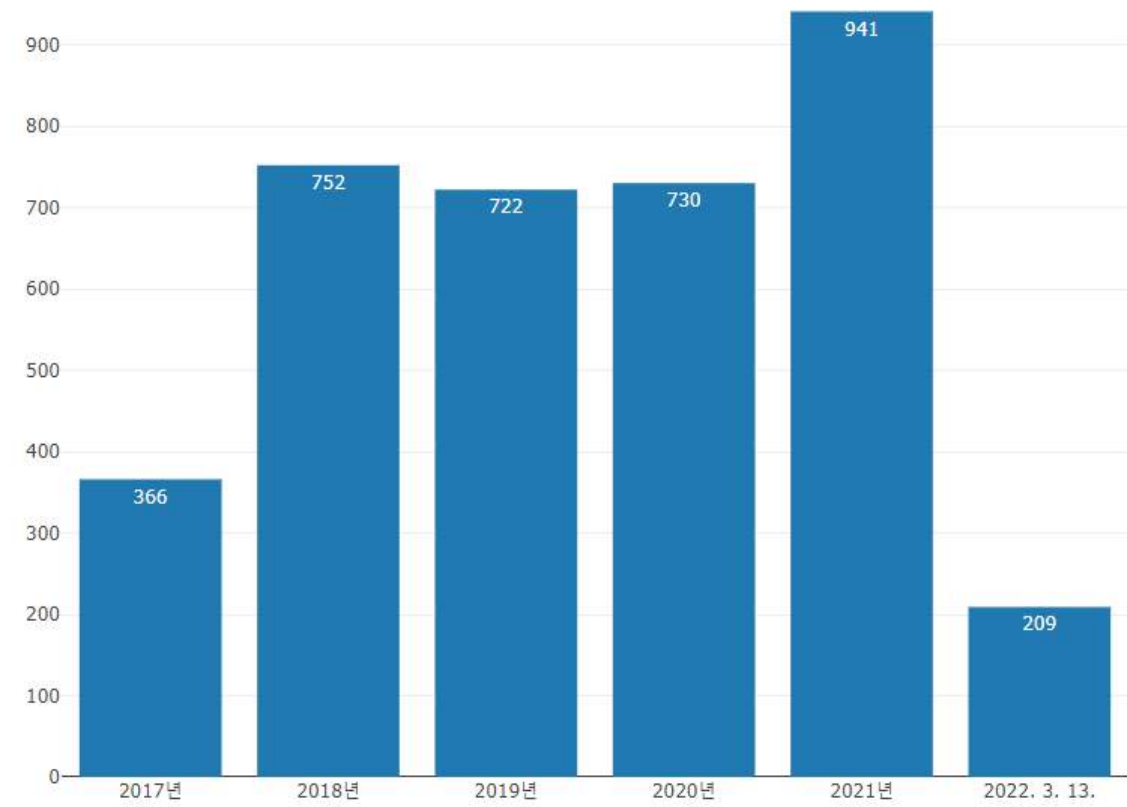
[http://factcheck.snu.ac.kr/v2/facts?category=cross\\_issue](http://factcheck.snu.ac.kr/v2/facts?category=cross_issue)



# SNU팩트체크의 양적 성장

- 지난 5년간 SNU팩트체크 플랫폼에 게시된 팩트체크 기사는 총 3720건 (2022년 3월 13일 기준)
- 해마다 증가 추세이며 연평균 700건이 넘는 사실 검증 기사 생산
- 제휴 언론사 숫자는 15개에서 31개사로 늘어남.

연도별 팩트체크 개수





# SNU팩트체크의 질적 성장

- 팩트체크 검증 기사의 길이와 근거자료 수는 꾸준히 증가.
- 2017년 평균 기사량은 1183자였으나 2021년에는 2148자로 늘어남
- 언론사들이 검증기사를 작성할 때 사용한 근거자료의 개수는 2017년 0.45개에서 2021년 4.36개로 늘어남.
- 가장 많은 근거자료를 활용한 기사는 뉴스 톱의 ‘페미니즘이 불러온 뉴질랜드의 남자 부족 현상’ 유튜브 동영상에 대한 검증으로 총 28개 검증 자료 사용.







# 코로나 19와 팩트체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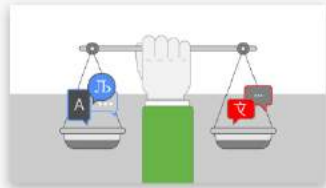
- 2020년 코로나19 발생 이후 전 세계 86개국 이상이 16,000개 이상의 팩트체크를 40여개 언어로 게시.  
SNU팩트체크는 2020년 코로나 발생 이후 2022년 3월 13일 현재 520개의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팩트체크 제공

# 팩트체크, 어떻게 할 것인가

fact chec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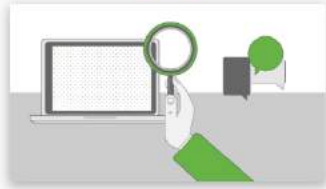


## The commitments that signatory organizations abide by are:



### **1. A commitment to Nonpartisanship and Fairness**

Signatory organizations fact-check claims using the same standard for every fact check. They do not concentrate their fact-checking on any one side. They follow the same process for every fact check and let the evidence dictate the conclusions. Signatories do not advocate or take policy positions on the issues they fact-check.



### **2. A commitment to Transparency of Sources**

Signatories want their readers to be able to verify findings themselves. Signatories provide all sources in enough detail that readers can replicate their work, except in cases where a source's personal security could be compromised. In such cases, signatories provide as much detail as possi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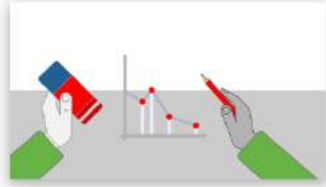
### **3. A commitment to Transparency of Funding & Organization**

Signatory organizations are transparent about their funding sources. If they accept funding from other organizations, they ensure that funders have no influence over the conclusions the fact-checkers reach in their reports. Signatory organizations detail the professional background of all key figures in the organization and explain the organizational structure and legal status. Signatories clearly indicate a way for readers to communicate with them.



### **4. A commitment to Transparency of Methodology**

Signatories explain the methodology they use to select, research, write, edit, publish and correct their fact checks. They encourage readers to send claims to fact-check and are transparent on why and how they fact-check.



### **5. A commitment to an Open & Honest Corrections Policy**

Signatories publish their corrections policy and follow it scrupulously. They correct clearly and transparently in line with the corrections policy, seeking so far as possible to ensure that readers see the corrected version.

- IFCN 준칙  
(Int'l Fact Checking Network)
- 1. 불편부당성과 공정성
- 2. 취재원 투명성
- 3. 자금과 조직의 투명성
- 4. 검증방법의 투명성
- 5. 공개적이고 정직한 수정



### SNU팩트체크원칙

1. 팩트체크는 불편부당성과 비 당파성을 견지해야 한다.

: 팩트체크를 하는 주체는 이해관계가 얽힌 사안을 다룸에 있어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다. 팩트체크하는 사안에 대해 지지나 반대 등의 입장을 취하지 않는다.

2. 팩트체크의 검증대상은 아래와 같다.

① 정당한 공적 관심사(public concern)와 관련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선거, 입법 등 시민의 공적 생활이나 보건, 환경 등 시민의 안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 검증 대상이 되어야 한다.

② 실질적 근거를 동원해 사실성을 가릴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의견은 검증대상이 될 수 없다.

③ 시민들이 팩트체크의 검증대상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한다.

3. 팩트체크의 과정은 일관되고 명확한 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 사실성에 오류가 없는지 여부가 검증대상의 선정부터 판정까지 검증과정을 일관하는 기준이어야 한다. 어떠한 편견 없이 오로지 증거가 결론을 이끌어내도록 해야 한다. 시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검증의 전체적인 맥락을 설명해야 한다.

4. 팩트체크의 근거자료들은 확인가능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 팩트체크를 하는 주체는 취재원의 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는 한 자신들이 검증에 사용한 근거를 이용자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최대한 구체적으로 밝힌다.

5. 팩트체크에 오류가 있다면 이를 정직하게 수정하고 공개적으로 알려야 한다.

: 팩트체크를 하는 주체는 검증결과나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다면 그 이유를 명시적으로 밝혀야 한다. 시민들이 검증결과를 보고 오류를 발견했거나, 검증결과가 공인이 아닌 사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해서 신고할 경우 팩트체크의 주체는 이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6. 팩트체크의 재원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 팩트체크를 하는 주체들은 재정지원을 받았을 경우 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팩트체크의 재정지원 원칙은 '지원은 하되 검증결과에는 간섭하지 않는다'는 팔길이 원칙 (arm's length)이 지켜져야 한다. 재정지원이 검증 과정이나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팩트체크하는 사안의 이해관련자나 당사자 등의 재정지원을 받아서는 안 된다.

7. 팩트체크의 주체들은 정당이나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의 구성원이어서는 안 된다.

: 팩트체크의 주체들은 정당의 구성원이어서는 안 된다. 팩트체크의 주체들은 검증대상과 연관이 있는 이해집단의 구성원이어서는 안 된다.





# 검증대상 선정에서 지켜야할 것들

- 팩트체크는 불편부당성과 비 당파성을 견지해야 한다.  
: 팩트체크를 하는 주체는 이해관계가 얽힌 사안을 다룸에 있어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다. 팩트체크하는 사안에 대해 지지나 반대 등의 입장을 취하지 않는다.
- 팩트체크의 검증대상은 정당한 공적 관심사(public concern)와 관련 있는 것이어야 한다. 선거, 입법 등 시민의 공적 생활이나 보건, 환경 등 시민의 안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 검증대상이 되어야 한다.



# 검증대상 선정에서 지켜야할 것들

- 검증대상 선정에서 의견은 검증대상이 아니다  
: 특정인의 발언 중 의견과 사실적 검증이 가능한 것이 섞여 있을 경우, 사실적 검증이 가능한 것만을 검증

- <http://factcheck.snu.ac.kr/v2/facts/3661>

- “한국의 코로나 19 방역 통제는 세계에서 가장 약한 수준이다” 는 타국이라는 비교대상, 가장 약한 이라는 정도를 가늠해볼 수 있는 기준 제공

<http://factcheck.snu.ac.kr/v2/facts/3910>

“(장애인 단체는) 문재인 정부와 박원순 시장이 있을 때는 말하지 않던 것들을 지난 대선 기간을 기점으로”



# 조사과정에서 지켜야할 것들

- 최초의 주장이 어디서 비롯됐는지를 살피고, 원 주장자에게 설명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반론권의 부여이자 출처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경제적인 조사방법이기도 하다.
- 투명성 원칙의 견지 (Show your work)  
:취재과정과 취재원을 뉴스 이용자에게 밝혀야 한다.  
통계, 연구논문 등 뉴스 이용자들도 접근 가능한 공개적이고 독립적이며 1차적인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취재원은 익명으로 하지 않는다.





## 조사과정에서 지켜야할 것들

- 독립적인 취재원을 확보하지 못할 때는 서로 입장이 다른 다수의 전문가 혹은 관련인들로부터 증거를 청취하여 겹치는 부분을 확인한다.(진실의 삼각검증 triangulating the truth)
- <http://factcheck.snu.ac.kr/v2/facts/3503>

백신 접종 후 심근염, 주사 접종방식 잘못돼 생긴다

심근염 원인 규명 중인 홍콩의 한 논문이 인용돼 유포되고 있지만, 정설은 없는 상태. 전문가, 다른 연구결과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한 뒤 판단유보.



# 바람직한 팩트체크 기사작성 과정

- 팩트체크 기사는 역 피라미드가 아닌 피라미드 방식으로 작성되는 것이 설득력이 높다.  
어떠한 일이 왜 발생했는지 맥락을 제시할 때 뉴스 이용자들의 이해가 높아질 수 있다.  
“시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검증의 전체적인 맥락을 설명해야 한다”
- 취재과정을 투명하게 정보 이용자들에게 밝혀야 한다.  
검증 과정에서 인용한 것들을 최대한 링크를 통해 연결.  
투명성을 통해 객관적이었음을 독자로부터 인정받는 것.

<http://factcheck.snu.ac.kr/v2/facts/3712> (실명 인용)



## 바람직한 판정과 오류 수정

- 사실 아님, 사실의 판정은 오로지 증거가 제시하는 것만을 따라가야 한다.

“어떠한 편견없이 오로지 증거가 결론을 이끌어내도록 해야한다”

<사례> 폴리팩트

기사 쓴 기자와 담당 데스크가 판정한 뒤 다시 이 기사 작성에 개입하지 않은 두 명의 에디터가 더 검토해서 최종 3명의 에디터 투표 후 2표 얻어야 최종 판정

- 오류는 즉각, 공개적으로 수정되어야 한다.



# 팩트체크 실행의 주요 원칙

	주요원칙	내용
1	검증대상은 사실 여부를 가릴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의견은 검증의 대상이 아니다. 사실여부를 가릴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2	조사는 발언자로부터 시작한다	검증해야 할 대상의 사실성을 입증해야 할 1차적인 책임은 이를 주장한 발언자에게 있다. 검증 내용에 대한 확인을 발언자로부터 시작함으로써 당사자를 팩트체킹의 과정에 참여하게끔 한다.
3	조사의 출처는 편중되지 않아야 한다	이견(異見)을 수용해야 한다. 찬성과 반대의 양자 의견을 다 청취한 뒤 진실을 파악하기 위한 삼각 측정을 수행한다.
4	증거는 물적 토대를 가진 것이어야 한다	공신력있고 당파적이지 않은 기관으로부터 나온 통계자료, 법원 판결, 학술 논문 결과, 측정의 질과 공정성을 신뢰할 수 있는 측정치 등 단단한(hard) 물적 자료를 근거자료로 사용해야 한다.
5	최대한 익명 인용을 배제한다	공개되었을 때 취재원의 신변이 밝혀질 정도가 아니면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부득이하게 익명 인용을 하는 경우에도 인물에 관한 정보를 최대한 자세하게 제시한다.
6	자료의 출처를 독자들에게 투명하게 밝힌다	독자들이 기자가 한 것과 동일한 과정을 거치더라도 기자가 판정한 것과 동일한 결과에 이를 수 있는지 스스로 검증해 보도록 취재과정에서 획득했던 모든 정보를 최대한 공개한다.
7	판정결과는 가장 나중에 밝힌다	팩트체크 기사의 서술은 결론에 이르기까지 과정을 밝힘으로써 판정결과에 대한 설득을 이끌어내는 것이므로 판정결과는 마지막에 서술한다.
8	오류는 공개적으로 즉각 수정한다	오류는 독자들이 알 수 있게끔 공개적이고도 즉각적으로 수정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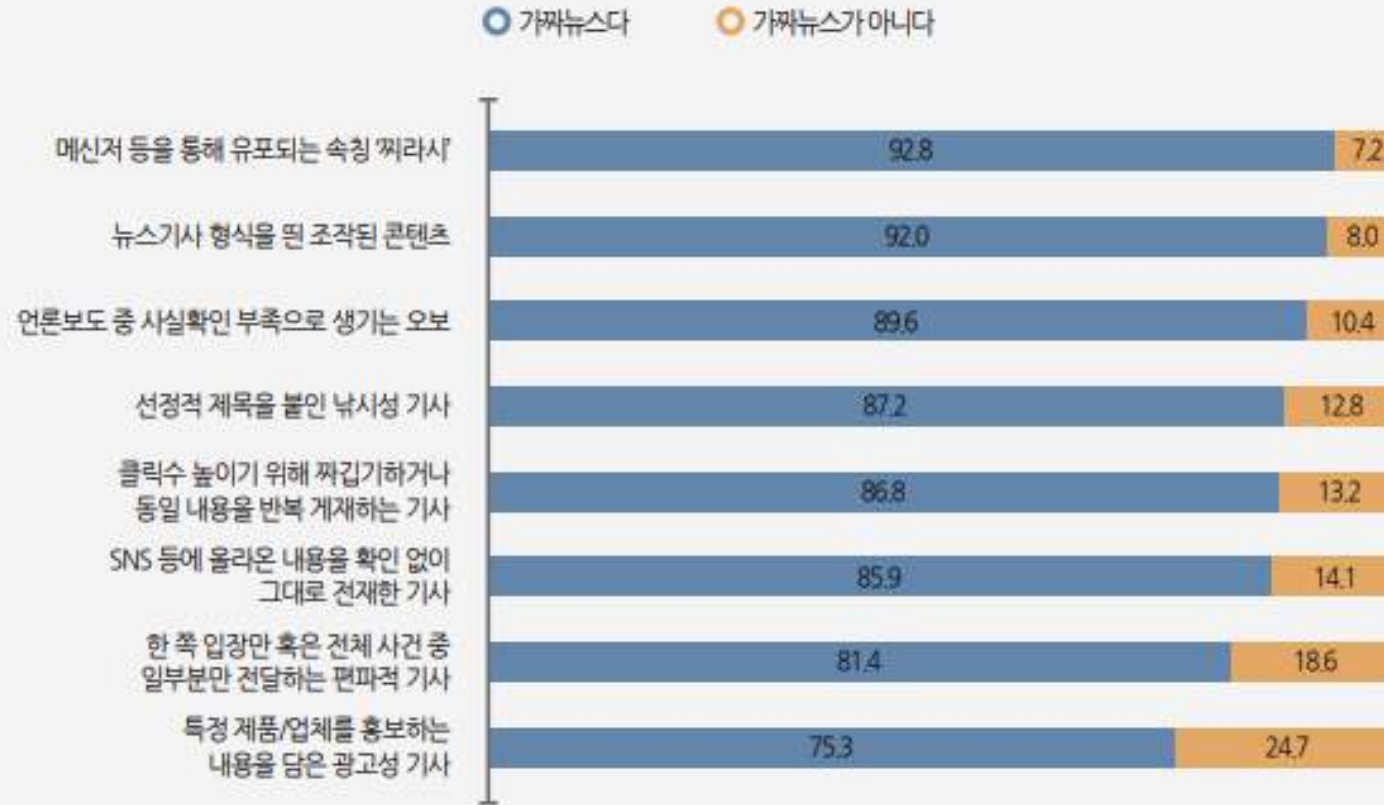
# 팩트체크와 시민

fact check

# 언론이 가짜뉴스를 생산한다는 시민들의 평가

콘텐츠 유형별로 '가짜뉴스'라고 생각하는 비율

(단위: %)



※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연구센터 온라인 설문조사 (2019년 2월 13~17일, N=1,200)



# 팩트체크 효과는 있는가

- 연구결과에서도 역효과(backfire effect) vs. 교정효과(correction effect) 맞섬
- 시민들은 성향과 호오에서 백지상태가 아니며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음



# SNS와 선택적 노출, 선택적 공유

- SNS 환경은 선택적 노출과 확증편향이 강화될 수 있는 구조를 제공.
- 팩트체크 결과도 선택적 노출(selective exposure), 선택적 공유(selective sharing)
- 자신이 이미 갖고 있는 확증편향에 반대되는 팩트체크에 노출될 경우, 오류를 수정하기보다는 기존의 신념이 더 강화되는 경향이 발견되기도 함





# 팩트체크는 시민과의 대화다



기타 | 20대 대통령 선거, 4.15 총선  
투표 때 투표용지 촬영해도 처벌받지 않는다



<http://factcheck.snu.ac.kr/v2/facts/3851>

인터넷 커뮤니티 및 SNS 출처: 인터넷 커뮤니티 및 SNS

KBS 중앙일보

댓글 0 공유



기타 | 코로나19, 코로나백신  
3차 접종하고 확진된 사람도 '4차 접종' 해야 한다



SNS 및 온라인 커뮤니티 출처: SNS 및 인터넷 커뮤니티

<http://factcheck.snu.ac.kr/v2/facts/4035>

KBS

댓글 0 공유



감사합니다